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 -722
----------	--------

제출년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박은정, 박태순, 현옥순,  
송바우나, 한갑수, 이지화,  
김진숙, 김유숙, 선현우,  
황은화, 박은경 의원(11인)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 2. 제안이유

-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
-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자체 조직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을 규정하여 통제받고 있음.
- 2025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의회사무기구에 복수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98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하고,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권한도 증가하였음.
- 더 나아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비단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자체 정원 또한 대폭 증가하였음.
-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의회사무국에도 하부조직으로 최소한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 릴 수 있을 것 임.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 담당관 설치를 건의함.

### 3. 참고사항

- 참고 자료 : 붙임
- 송 부 처 :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가 주요 골자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만 독립 되었을 뿐, 자체 조직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을 규정하여 통제 받고 있다.

2025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전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금번 개정령안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취지를 전혀 뒷받침 하지 못 하는 개정령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98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하고,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권한도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비단 100만 명 이상 특례시 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자체 정원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국장(4급)과 팀장(6급) 사이의 중간 직급인 담당관(5급)의 부재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령안은 지방의회 조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 특례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금번 개정령안은 제도개선에 일부 미흡한점이 있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의회사무국에도 하부조직으로 최소한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 릴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진정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의회와 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한에 대한 제도를 현실화 하라!

하나.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5. 4.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1****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현황(2025. 1. 24.)**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특례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평택시	○ 경상남도 창원시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김포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김해시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13호(2025. 1. 24.)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개정령안	개정 건의안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u>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u> 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u>인구가 50만</u> ----- ----- ----- ----- -----.
별표 4 제2호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호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u>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담당관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u>
3.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제외한다.)는 1명의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개정안과 같음)